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국제경제리뷰

조사국
국제경제부 신흥경제팀
한재현 과장(5291)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 ◆ 중국경제는 그동안의 양적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제반 문제점 및 인구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취약성이 제기됨에 따라 투자 및 수출 위주의 성장방식을 탈피하여 소비에 근간을 둔 내수 위주의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 ◆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은 소비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와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분야로 대별
 - 소비여력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개인소득세 면세점 상향 조정 등의 소득증대 조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그동안 소비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높은 수준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을 위한 조치와 사회보장제도 확충 및 호적제도 정비 등을 추진
 -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과잉설비 해소 및 국유기업 비중 축소, 환경관련 투자 확대,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등을 추진
 - ◆ 성장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정책 추진 효과를 소득증대, 소득 및 소비 격차, 부동산 및 사회보장, 경제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등 5개 부문 13개 지표로 평가해 본 결과 농촌지역 소득증대, 사회보장 관련 재정지출 확대 등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 구조조정 측면에서 소비의 성장기여율이 높아지고 내수기반 확충에 중요한 3차 산업의 비중도 점차 상승하였으며 대외교역 의존도가 하락
 - 그러나 소득의 증대 및 분배, 주택가격, 산업 구조조정 등의 분야에서는 성과가 미진함에 따라 동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이 가속될 필요
-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 지 오래되지 않는 데다 선결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는 만큼 그 효과가 각 분야에서 가시화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성장 둔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제반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강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음

I

검토 배경

-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1979~2012년) 연평균 성장률이 9.9%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그동안의 양적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제반 문제점(환경오염, 소득불평등 및 지역간 불균형 심화, 생산설비 과잉 등) 및 인구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취약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갈 필요성 증대

○ 경제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빈부격차**가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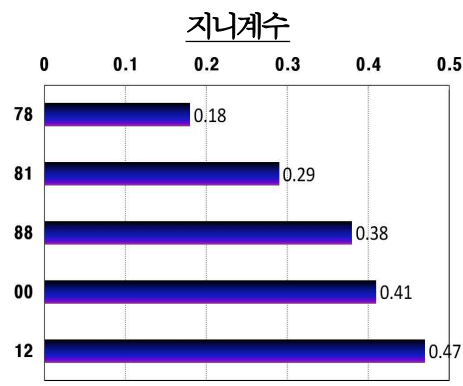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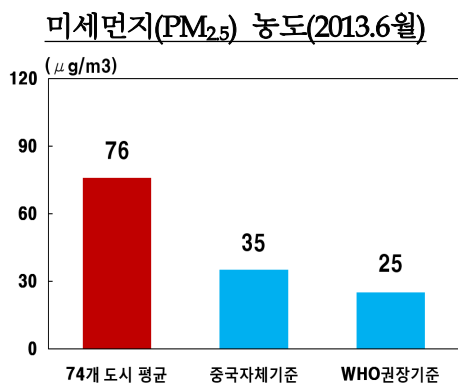
* 중국 주요 도시의 환경문제가 여타 국가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2013년 상반기 전국 74개 도시 미세먼지(PM_{2.5}) 농도 조사에서 기준치 이하의 도시는 라싸, 하이코우 등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지니계수는 2000년 이후 ‘사회적인 갈등과 불만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간주되는 0.4를 상회

○ 2012년 생산활동가능인구(15~59세)가 1949년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2011년 9.41억명→2012년 9.37억명)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

* 임금상승 없이 농촌지역의 잉여노동력이 완전히 흡수되는 시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에 도달하게 되면 저임금 노동에 의존한 제조업 발전이 한계에 이르면서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성장도 둔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BNP Paribas	중국사회과학원	IMF
추정 시기	2012.3월	2013.4월	2011.5월	2013.3월
LTP 도달 시점	2017년	2017년	2018년	2020~25년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투자 및 수출 위주의 성장방식을 탈피하여 소비에 근간을 둔 내수 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 성장 패러다임 전환은 제11차 5개년 계획(2006~10) 기간부터 시작된 이래 제12차 5개년 계획(2011~15)에서도 강조

— 제11차 계획 기간중 연평균 성장률 및 개인소득 증가율 목표는 7.5% 및 5%였으나 제12차 계획 기간의 목표는 모두 7.0%로 설정되는 등 성장의 질을 중시

○ 패러다임 전환의 성패는 향후 중국의 지속가능한 안정 성장기반 뿐만 아니라 세계 및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

II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 중국 정부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내용을 소비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와 공급 측면에서의 구조개혁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

1. 소비여력 강화를 위한 정책 분야

- 정부는 소비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부동산, 사회보장제도 등의 부문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이를 위해서는 ①사회안전망 확보에 따른 예비적 저축유인 약화, ②최저임금제를 통한 임금 인상 및 근로자 보호·단체협약제도 확립, ③의료, 교육 등의 공공재 공급 확대, ④누진세제 강화를 위한 세제구조 개혁 등이 주요 과제인 것으로 지적(T.I.Palley, 2011)

(소득 증대)

-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92년 55% → 11년 47%)으로 인한 소비여력 약화에 대응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지속적인 인상, 개인소득세의 면세점 상향 조정,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조치 등을 시행

○ 최저임금*은 2006~12년 중 연평균 19.1%를 기록하여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36.8%에 도달(2012년 기준)

* 최저임금 인상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계층의 소득 및 소비 증대와 연관되는데, 도시가계의 소득 기준으로 상중하로 구분할 경우 각각의 한계소비성향은 66.3%, 77.4% 및 96.1%(1986~2010년 평균)

주요국의 최저임금과 1인당 국민소득 비교(2012)

	최저임금(현지통화)	최저임금(달러)(A)	1인당 국민소득(달러)(B)	비율(%) (A/B)
멕시코	15,741	1,212	9,742	12.4
미국	15,080	15,080	49,965	30.2
브라질	7,464	3,720	11,340	32.8
중국	13,968	2,242	6,091	36.8
일본	1,539,200	17,882	46,720	38.3

자료 : OECD, World Bank자료 기초로 자체 계산

○ 개인소득세의 면세점은 월 기준으로 1,600위안(2006.1월)에서 3,500위안까지 상승(2011.9월)하였으며, 임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권리 등을 규정한 개정 ‘노동계약법’을 2013.7월부터 시행

○ 곡물수매가 인상, 농업보조금 확대, 농업기반시설 투자 등을 위한 3농 관련 예산액이 2012년 1.23조위안에서 2013년 1.37조위안으로 11.3% 증가(전체 예산 증가율은 8%)하는 등 농민소득 증대에 노력

○ 국무원은 2013년 초반 ‘소득증대 및 분배제도 개혁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2013.2월)

— 2020년까지 국민소득을 2010년 기준 2배 증대, 노동소득분배율 제고, 공적부조 확대 등을 통해 빈곤층(연간소득 2,300위안 미만) 규모를 2011년말 1.3억명에서 2015년 0.8억명으로 축소

- 또한 소비 촉진을 위해 카드(신용·직불) 보급 확대* 및 수수료의 대폭 인하** 등을 통해 카드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

* 신용카드 발급 규모(억장) : 0.5(06) → 1.4(08) → 2.3(10) → 3.4(12)

** 카드수수료를 종전의 평균 2%에서 1.25%로 인하(국가발전개혁위, 2013.1.21.일)

(부동산시장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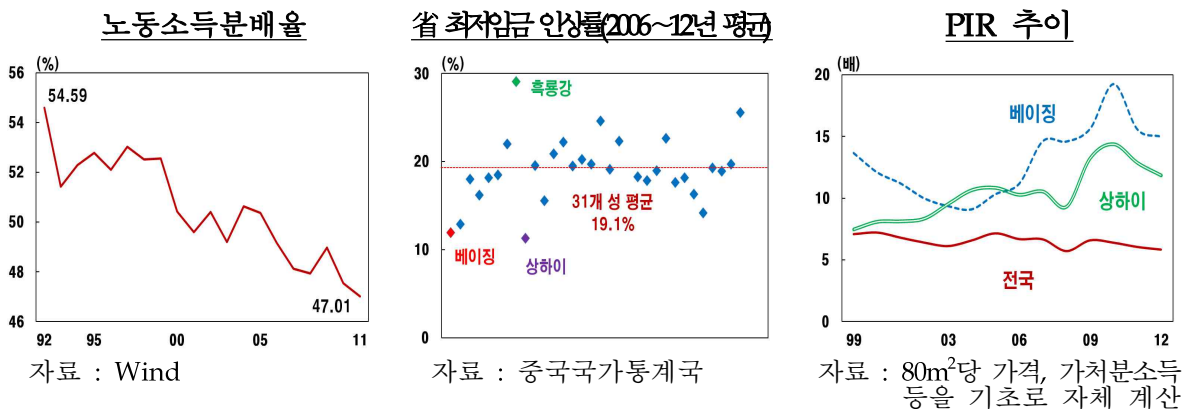
- 소비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높은 수준의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을 위해 각종 투기억제 정책과 함께 서민층 대상의 임대주택공급 등을 병행

- 베이징, 상하이 등지의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이 적정 수준(3~6)을 초과한 10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를 강화

* 2주택 구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매매차익의 20% 소득세 징수(2013.2월),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부동산개발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2013.4월) 등

- 제12차 계획기간(2011~15년)중 3,600만채의 보장성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 2011년 432만채, 2012년 550만채, 2013.8월말 현재 356만채 완공



(사회보장제도 및 호적제도 정비)

-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해 가계의 소비율 제고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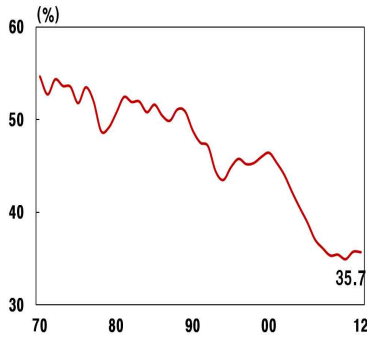
- 가계소비의 GDP비중은 40% 미만으로 미국(7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데, 그 요인의 하나로 미흡한 사회안전망에 따른 높은 저축률을 지적

- 가계저축률(저축/가처분소득)이 1992년 29.5%에서 2009년 40.4%로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가격의 시장결정 확대와 함께 주거 및 학업 등과 관련된 비용 부담의 주체가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전**된 데에 주로 기인

* 2009년중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15개국(한국, 중국, 인도, 홍콩 등)을 기준으로 중국은 15개국 전체 GDP의 52%를, 전체 가계저축액의 66%를 차지하여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저축률을 기록(E.S.Prasad,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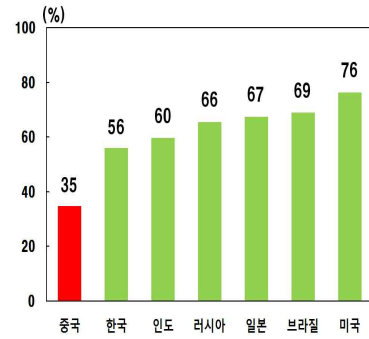
** 목표 소득대체율이 하락하고(75~90% → 59%) 부담률이 높아졌던 중국의 1995년 연금제도개혁을 전후하여 저축률이 20대에서는 6~9%p, 50대에서는 2~3%p 상승한 것으로 추정(Jin Feng 등, 2011)

가계소비/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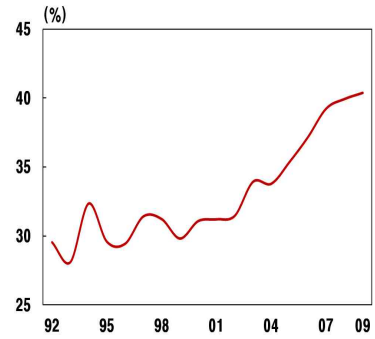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주요국의 가계소비/GDP 비중
(2010년, PPP기준)



자료 : Penn World Table 7.1

가계저축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교육·주택·의료의 3개 부문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이 늘어나면서 총예산 대비 비중이 2009년 8.3%에서 2013년 12.9%까지 상승

— 도농지역의 의료보험 관리체제가 통합되고 기초양로보험의 전국 통합방안이 마련(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2013.6월)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꾸준히 확대

□ 한편 경직적인 호적제도에 기인한 농민공* 확대도 소비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최근 호적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민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제도를 개선

* 2012년말 현재 도시거주 인구 7.1억명에서 도시호적 보유 인구는 4.7억명에 불과하며 2.4억명은 주로 농민공으로 구성된 유동인구로 추정

○ 농민공이 지출한 2012년 소비규모가 6,770억달러(인도네시아-인구 2.5억명- 소비지출액의 1.5배, FT 13.7월)에 이르고 있으나 사회보장 혜택 소외, 고용의 불안정 등으로 예비적 저축유인이 강하고 내구재 구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등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이로 인한 소비 억제 규모는 GDP의 1.8% 정도로 추정, 陆铭 2012)

○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농민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을 확대하였고, 그 결과 육아(生育), 실업(失業), 양로(養老), 의료(醫療) 및 상해(工傷)의 5대 사회보험에 대한 농민공의 평균 가입률이 2008년 10.5%에서 2012년 13.9%로 상승

○ 주요 지방정부로는 충칭(重慶)이 2010.8월 이후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2020년까지 1,000만명 정도의 농민공을 도시민으로 전환시킬 계획이고, 광저우(廣州)도 현재 학력·기술·직업에 따라 차등적 점수를 부여하고 호적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

* 2013.6월말 현재 14개 성(시)이 도농간의 일원화된 호적제도 개혁방안을 검토(국무원)

2. 구조개혁과 관련된 정책 분야

□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 리코노믹스(Likonomics)로 지칭되는 구조개혁(structural readjustment)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과잉설비 해소 및 국유기업 비중 축소)

□ 설비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과잉설비를 해소하는 데 노력

* 철강, 비철금속, 석탄, 시멘트 등이 대표적인 과잉설비 산업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설비 가동률은 80% 미만에 불과하여 통상 합리적 수준으로 간주되는 85% 내외를 하회

- 베이징·톈진·허베이 등의 지역에 소재하는 설비과잉 산업에 대해 신규프로젝트 인가를 금지(2013.9월)
- 국무원은 최근 대표적 과잉설비 산업으로 지적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및 조선의 5대 업종에 대해 향후 5년간의 ‘과잉생산능력 축소 로드맵’을 발표하고 진입제한 및 지방정부의 의무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2013.10월)

□ 또한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성격*이 강한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기업 독점 부문에 대한 민간기업의 진출 및 투자장려 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국유기업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도 노력

* 2012년 기준으로 국유기업은 전체 기업 총자산의 41%, 매출의 26%, 순이익의 27% 및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된 73개의 중국 기업중 93%(68개)가 국유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국무원이 철도·통신·금융 등에 대한 진입장벽 축소, 민간자본 진출 범위의 세분화 및 국유기업의 국유자본 비중 축소 등을 규정한 민간투자 촉진조치(2010.5월 및 2012.7월)를 실행함에 따라 전체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민간자본의 비중이 2011년 이후 빠르게 상승

고정자산투자 중 민간자본 비중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
비중(%)	35.6	41.1	45.0	47.0	48.2	51.1	58.1	61.4	63.6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한편 국유기업의 수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하락

국유·국유지배 제조업체 수량과 전체기업의 총자산 대비 비중¹⁾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숫자(개)	29,229	26,101	21,067	20,463	20,528	20,179	16,415	17,341
자산 비중(%)	69.7	66.3	63.9	62.8	62.9	61.4	58.3	57.7

주 : 1) 연매출 2천만위안 이상 기업 대상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환경관련 투자 확대)

□ 산업구조를 고도화·선진화하기 위해 공해유발 산업에 대한 규제와 퇴출, 환경관련 투자 확대 등을 추진

- 정부는 ‘순환경제촉진법’을 제정하여 오염방출량 통제, 생산자 책임강화,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중점 관리감독 등을 개시(2009.1월)

— 환경오염처리 관련 투자액이 2001년의 1,107억위안에서 2006년 이후 급증하여 2011년에는 6,593억위안까지 5배 이상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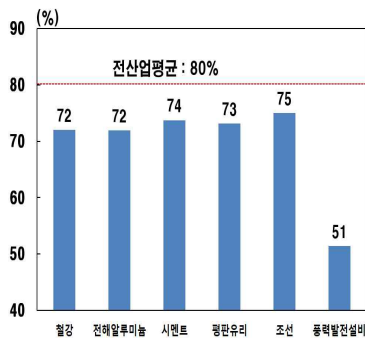
- 공업정보화부는 매년 노후 및 공해유발 시설을 대상으로 퇴출대상 노후설비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

- 2013년의 경우 제철 1,044만톤, 시멘트 7,345만톤, 제지 455만톤 등 19개 산업의 퇴출대상 노후설비용량을 발표하였으며(2013.4월), 각각 7월, 9월, 10월 등 3차에 걸쳐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
- 국무원은 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육성을 통해 2010년말 2조위안 수준인 관련산업 생산액을 2015년 4.5조위안으로 확대할 계획(2012.6월)
 -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입보조금(3.5~6만위안)정책의 만기를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연장하고 신규 공무용 차량의 30%는 신에너지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 등) 구입을 의무화(2013.9월)하는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 대체에너지, 바이오기술 등 7대 신흥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신산업에 대해 적극적 투자/지원을 통한 주력산업으로의 육성 계획(국무원, 2010.10월 및 2012.3월)을 추진하고 '기술자립형 국가'의 비전하에 R&D투자도 대폭 확대

(금융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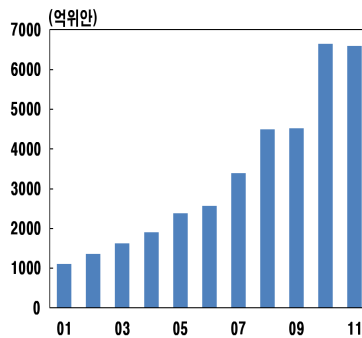
- 국무원 등 관련 부처는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
 - 과잉설비 산업에의 차별적 대출을 통한 자연도태 유도, 3농관련 보험업무 개발, 신용카드의 사용환경 개선을 통한 소비자금융 활성화, 민간자본의 금융업진출 확대 등을 발표('경제구조조정 및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 , 2013.7월)
 - 인민은행도 과잉설비산업에 대한 대출 억제를 강조(2013.2/4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서, 2013.8.2.일)

주요 과잉설비산업 설비가동률(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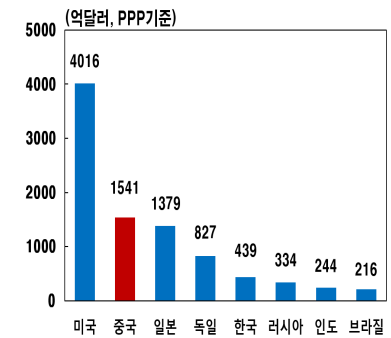
자료 : 易誠(2013)

환경오염처리 관련 투자액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주요국 R&D 지출액



자료 :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 2012

Ⅲ

종합 평가

- 성장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정책 추진 효과를 소득증대, 소득 및 소비 격차, 부동산 및 사회보장, 경제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등 5개 부문의 13개 지표로 평가해 본 결과, 농촌지역 소득증대, 사회보장 관련 재정지출 확대 등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장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평가 항목¹⁾

부문	항목	2006	07	08	09	10	11	12
소득증대	최저임금(월)	1.0	1.1	1.4	1.7	1.7	2.1	2.3
	도시가계 1인당 가처분소득(연간)	2.0	2.3	2.6	2.9	3.2	3.6	4.1
	농촌가계 1인당 현금소득(연간)	1.8	2.1	2.4	2.6	3.0	3.6	4.1
	노동소득분배율	8.2	8.0	8.0	8.2	7.9	7.8	7.8
소득 및 소비 격차	지니계수	6.1	6.3	6.1	6.1	6.3	6.3	6.4
	농촌/도시 가계소비 비중	6.5	6.4	6.5	6.5	6.5	6.9	7.1
부동산 및 사회보장	제곱미터당 주택가격(35개 도시)	2.6	2.2	2.2	1.8	1.6	1.6	1.5
	교육주택의료 예산 비중	0.3	0.3	0.3	1.4	1.6	1.8	2.1
경제구조 조정	3차산업/GDP 비중	3.4	3.5	3.5	3.6	3.6	3.6	3.7
	대외교역 의존도	4.6	4.8	5.3	6.8	6.0	6.0	6.4
	가계소비/GDP 비중	6.2	6.0	5.9	5.9	5.8	6.0	6.0
	소비 성장기여율	5.8	5.7	6.3	7.1	6.2	7.9	7.4
산업구조조정	과잉설비산업(철강+시멘트) 가동률	10.2	9.8	9.2	8.9	8.5	8.5	8.6
합 계		58.7	58.6	59.7	63.5	61.9	65.8	67.4

주 : 1) 후베이성 경제발전방식 전환평가 시스템(2012.10.26.일)을 원용하되, 목표 대비 실제 값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100점 기준으로 산출(구체적 내용은 <참고> 성장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평가 항목 및 가중치 참조)

- 경제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소비의 성장 기여율이 높아지고 서비스업 등 내수기반 확충에 중요한 비교역재 생산이 확대되면서 3차산업의 비중도 점차 상승
 - 경기상황에 따른 등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성장 기여율이 2011년에는 10년 만에 50%를 넘어서는 등 소비의 역할이 꾸준히 확대

소비의 성장기여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성장기여율(%)	40.4	39.6	44.1	49.8	43.1	55.5	51.8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제10차 5개년 계획(2001~05년) 이후 3차산업의 성장률은 전체 산업의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매판매 증가율도 상승

제9차~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3차산업 성장률 및 소매판매증가율¹⁾

	9차(1996~00)	10차(2001~05)	11차(2006~10)	12차(2011~15)
3차산업성장률(%)	9.5	10.5	12.0	8.8
소매판매증가율(%)	10.7	11.4	18.6	15.7

주 : 1) 기간중 평균(전년동기대비)이며 12차는 2011,12년 평균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또한 대외교역 의존도가 2006년 65%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2년 47%를 기록

○ 그러나 소득의 증대 및 분배, 주택가격, 산업 구조조정 등의 분야에서는 성과가 미진함에 따라 동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이 가속될 필요

- 도농간 소득격차는 2011년 이후 약간 축소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계 소득이 농촌가계의 소득을 2.5배 정도 상회하고 있는 데다 지니계수도 0.47~0.49의 높은 수준을 유지

도농간 소득 격차 및 지니계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도시/농촌 소득비율(배) ¹⁾	2.73	2.78	2.75	2.74	2.70	2.52	2.51
지니계수	0.49	0.48	0.49	0.49	0.48	0.48	0.47

주 : 1) 도시가계 가처분소득/농촌가계 현금소득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그 간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이 추진되는 상황 하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농촌가계의 전체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상승하는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도 시급한 상황

전국 35대 도시 평균주택가격 및 농촌가계의 의료비 관련 지출 비중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주택가격(위안/m ²)	4,010	4,350	5,128	5,130	6,328	6,830	7,080	7,649
농촌가계 의료비 지출 비중(%)	7.9	7.9	7.6	7.8	8.2	8.5	9.2	9.5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 한편 과잉설비가 존재하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환경오염 규제에 있어서도 아직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 철강 등 과잉설비 산업의 경우 설비 가동률이 하락하는 등 과잉설비가 종전보다 누증되고 있는 실정

주요 과잉설비산업의 설비가동률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조선
2008년	75.8	73.3	73.2	88.3	60.6
2012년	72.0	73.7	71.9	73.1	75.0

자료 : 중국국무원,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 대기오염을 포착하는 대표적 지표인 1인당 이산화황(SO₂) 배출량은 2006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질오염과 관련된 1인당 공업폐수 배출량은 계속 증가*

* 1인당 이산화황 배출량(kg) : 19.7(06) → 17.5(08) → 16.3(10) → 15.6(12)

1인당 공업폐수 배출량(ton) : 3.9(06) → 4.3(08) → 4.6(10) → 5.1(12)

-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 지 오래되지 않는 데다 선결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는 만큼 그 효과가 각 분야에서 가시화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성장 둔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제반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강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음

< 참고 문헌 >

- 서창배,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 韓中社會科學研究 제7권 제2호, 2009.8월
- 윤상하, 내수주도형 성장의 의미와 한계, LG Business Insight, 2009.5.13.
- 陆铭：户籍壁垒影响人们“幸福感”，新京报, 2012.10.31.
- 余官胜, 社会保障参与和居民消费需求-基于省际动态面板数据的实证研究, 中国软科学, 2011年第4期
- 易诚, 产能过剩与金融风险防范, 中国人民银行研究局, 中国金融, 2013.10.4.
- 郑新立, 改革引领经济平稳增长, 经济参考报, 2013.7.31.
- 中國國家統計局, 2012全国农民工监测调查报告, 2013.5.27.
- 中國廣播網, 我国社保缴费率并非全球最高, 2012.9.11.
- 環境保護部, 上半年全國環境質量狀況, 2013.8.2.
- 湖北省统计局, 湖北转变经济发展方式的统计评价与路径选择, 2012.10.26.
- BIS, Statistics on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2013.1.
- Eswar S.Prasad, Rebalancing Growth in Asia, International Finance 2011, Volume 14, 2011.4.3.
- Financial Times, China's migrant workers step out of the shadows, 2013.7.5.
- _____ , China may be in much better shape than it looks, 2013.10.16.
- IMF, People's Republic of China-2013 Article IV Consultation, 2013.7.
- Jin Feng, Lixin He, Hiroshi Sato, Public pension and household savings : Evidence from urban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9, 2011
- Nicholas Lardy, Nicholas Borst, A Blueprint for Rebalancing the Chinese Econom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3.2.
- R.Rutkowski, Ignore the Noise : Why Chinese Household Consumption is Still Too Low, Peterson Insi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3.8.12.
- Standard Chartered, Asia leverage uncovered, 2013.7.1.
- The New York Times, How Much Should We Worry About A China Shock, 2013.7.20.
- The Wall Street Journal, Murky Data Muddy Debate on Chinese Consumers' Strength, 2013.8.5.
- Thomas I.Palley, The Contradictions of export-led growth, Public Policy Brief, Levy Economics Institute, No.119, 2011

<참 고>

성장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평가 항목 및 가중치

분야별 목표 및 가중치

부문	항목	단위	목표	가중치(%)
소득증대	최저임금(월)	위안	2,500	5
	도시가계 1인당 가처분소득(연간)	위안	30,000	5
	농촌가계 1인당 현금소득(연간)	위안	12,000	5
	노동소득분배율	%	60	10
소득 및 소비 격차	지니계수		0.3	10
	농촌/도시 가계소비 비중	%	50	10
부동산 및 사회보장	제곱미터당 주택가격(35개 도시)	위안	2,250	5
	교육주택의료 예산 비중	%	30	5
경제구조조정	3차산업/GDP 비중	%	60	5
	대외교역 의존도	%	30	10
	가계소비/GDP 비중	%	60	10
	소비 성장기여율	%	70	10
산업구조조정	과잉설비산업(철강+시멘트) 가동률	%	85	10

- 주 : 1) 후베이성 경제발전방식 전환평가 시스템(2012.10.26.일)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동 시스템은 경제발전, 경제구조조정, 기술혁신, 자원집중도, 사회민생 등 5개 부문 26개 항목으로 구성
 2) 도시가계 1인당 가처분소득 등 5개 항목은 후베이성 평가시스템 항목을, 나머지 8개 항목은 본문 내용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을 필자가 선정하여 사용
 3) 목표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음

	단위	목표	목표 선정 근거
최저임금(월)	위안	2,500	1인당 GDP의 50%
도시가계 1인당 가처분소득(연간)	위안	30,000	후베이성 평가 시스템 기준
농촌가계 1인당 순수입(연간)	위안	12,000	후베이성 평가 시스템 기준
노동소득분배율	%	60	후베이성 평가 시스템 기준
지니계수		0.3	아주 평등한 정도(0.2)의 1.5배
농촌/도시 가계소비 비중	%	50	1980년대 초반 수준
제곱미터당 주택가격(35개 도시)	위안/m ²	2,250	PIR 6일 경우의 가격
교육주택의료 예산 비중	%	30	OECD 하위권 수준
3차산업/GDP 비중	%	60	후베이성 평가 시스템 기준
대외교역 의존도	%	30	2006년의 절반 수준
가계소비/GDP 비중	%	60	후베이성 평가 시스템 기준
소비 성장기여율	%	70	일반적인 선진국 비중
과잉설비산업(철강+시멘트산업) 가동률	%	85	일반적인 인정 기준

항목별 및 연도별 실적치

부문	항목	2006	07	08	09	10	11	12
소득증대	최저임금(월)	500	574	708	870	870	1,060	1,151
	도시가계 1인당 가처분소득(연간)	11,759	13,786	15,781	17,175	19,109	21,809	24,565
	농촌가계 1인당 현금소득(연간)	4,302	4,958	5,737	6,270	7,089	8,639	9,787
	노동소득분배율 ¹⁾	49.2	48.1	47.9	49	47.5	47.0	47.01
소득 및 소비 격차	지니계수	0.49	0.48	0.49	0.49	0.48	0.48	0.47
	농촌/도시 가계소비 비중	32.5	32.2	32.6	32.6	32.5	34.4	35.4
부동산 및 사회보장	제곱미터당 주택가격(35개 도시)	4,350	5,128	5,130	6,328	6,830	7,081	7,649
	교육주택의료 예산 비중	1.9	2.0	1.6	8.3	9.7	11.0	12.4
경제구조조정	3차산업/GDP 비중	40.9	41.9	41.8	43.4	43.2	43.4	44.6
	대외교역 의존도	64.9	62.2	56.7	44.2	50.1	49.8	46.8
	가계소비/GDP 비중	37.1	36.1	35.3	35.4	34.9	35.7	35.7
	소비 성장기여율	40.4	39.6	44.1	49.8	43.1	55.5	51.8
산업구조조정	과잉설비산업(철강+시멘트) 가동률 ²⁾	87.0	83.5	78.5	75.5	72.5	72.5	73.0

주 : 1) 2012년은 자료 미비로 2011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2) 2006년 자료는 철강산업, 나머지 연도는 철강산업과 시멘트산업 평균치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중국국무원,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공업정보화부, 중국철강협회, 중국시멘트협회, 중국세관, Wind